

사분위, 조선대 정이사 선임 후폭풍 일파만파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을 뿜어내는 조선대의 야경이 장관이다. 21년 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이사 체제 출범을 기다리는 조선대. 지역주민들은 조선대가 호남을 넘어 동북아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성섭측 “수용 불가... 법적대응 나설것”

조선대측 “박씨일가 2명 선임 무효다”

교과부 “아무런 문제 없다...조만간 정이사체제 출범”

조선대학교가 정이사 선임에 따른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조선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으로 인해 정상화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종전이사(옛 경영진) 측이 교과부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법률 대응을 준비중이며, 조선대도 종전이사인 정애리씨가 추천한 후보 등에 대해 행정절차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선임된 7명의 이사를 중심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 체제를 출범시키는 한편 나머지 예비이사 1명과 미정인 이사 1명도 가능한 이른 시기에 선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전이사측과 조선대의 반발이 심해 자칫 정이사 체제 조기 안착이 어려워지지 않느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종전이사 “정이사 선임 무효” 법적 대응=박성섭측은 이번 교과부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만큼 법률적 모든 수단을 통해 무효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종전이사 측 한 관계자는 “애초 교과부가 정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했을 때 거부한 것은 교과부의 요청이 선임 방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교과부와 조선대가 추천한 인사들 중 4명이 선임된 것은 조선대 설립과 관계가 없는 이들이 정이사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법률적 효

력이 없다. 이제 모든 법적 방안을 동원해 이번 정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과부가 9명의 정이사 중 남은 1명의 정이사를 자신들에게 추천해주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선대 “마감 넘긴 후보 추천” 거부=조선대는 교과부가 선임한 정이사 가운데 6명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후보 추천 마감일자를 넘긴 정이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종전이사인 정애리씨가 추천해 정이사로 선임된 정씨의 큰 딸 박성숙씨는 추천 마감일(11월16일)을 넘겨 추천된 만큼 법적 하자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히 종전이사 정애리씨의 손자로 교과부에 의해 예비이사로 선임된 박영석씨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 체회의(12월10일)에서 회의 다음 날인 12월 11일 낮 12시30분까지 종전이사측으로부터 추천·추인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선임됐다. 하지만 선임 후 추천·추인 마감 시기를 3일이나 넘겼음에도 교과부는 이사 선임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교과부는 종전이사측이 박영석 예비이사를 추천·추인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선대는 조건부로 선임된 예비이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는 교과부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만간 법적 검토를 통해 예비이사 선임 취소 등을 위한 구체적인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조선대 총장이 이사회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과 관련하여도 교과부 이사 선임 재심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교과부 “아무런 문제 없다” 조만간 정이사체제 출범=교과부는 조선대와 박성섭측 등 일부 종전이사 측의 이의 제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의 정이사 선임 자체를 부인하는 종전이사 박성섭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의 전례와 판례 등에 따라 종전이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교과부는 종전이사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추천 마감일자를 넘기면서까지 정애리씨로부터 박성숙씨를 추천받아 정이사로 선임했고, 여기에 정애리씨의 손자인 박영석씨를 예비이사로 뽑았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1명의 정이사에 대해서는 박성섭측이 추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일부 사분위원들은 정이사 선임에 대한 신뢰도와 행정절차가 불안하다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정이사를 파견해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선임된 7명의 정이사에 대한 신뢰도와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2~3주 정도 시간이 걸리 때문에 서둘러도 이달 안에는 정이사 파견은 어렵고, 1월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간병서비스 전보 급여화 추진 중증장애인 연금 7월부터 도입

보건복지가족부 새해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은 경제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자리 15만개를 통한 빈곤 탈출”=정부는 먼저 서민 부담이 큰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현재 3만명 규모의 간병인을 내년 중 1만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에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한 다음 2011년에는 간병서비스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자활시범사업 대상자를 4개 지역, 3천200명으로 늘리고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2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과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전국

41만가구에 대한 한시생계보호 대책이 저소득층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저소득층의 가계수지는 여전히 만성적자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게다가 한시대책은 연말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백없는 서민보호’를 주창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민관 통합보호와 탈빈곤 추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33만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되며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를 100개소, CYS-넷은 166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인구위기 대책, 저출산 극복=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나태 감소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이 제도화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자립활동 촉진 수당과 양육비가 지원된다. 또 둘째자녀 이상을 가진 다자녀가구에 대한 교육 지원 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이 10만3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소득산정시 낮은 소득의 75%만을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해 보육료 지원대상이 1만8천명으로 확대된다.난임 맞벌이 부부는 또 낮은 소득의 50%만을 합산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시술비도 50만원내에서 3차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디서나 30분 내 응급치료 가능”=내년부터 3년간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119 구급지원센터는 3년동안 175개소 설치하고 낙도나 오지에는 ‘헬기·선박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의 의료기관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 육성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중 분만실이 없는 47개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분만실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NAVER **Sample House** 파/격/분/양

2단지 20필지 분양개시

1. 분양권 3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 이하 지원

2. 한·국·기·본·거·주·민·피·해·대·처·단·위·기·능

3. 분양권 보유기간은 1년(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062)375-7000

062)974-5553

한국 국가브랜드 세계 19~20위

OECD 포함 주요 50개국 조사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19~20위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포함해 세계 주요 5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브랜드를 조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NBDO(Nation Brand Dual Octagon)’라고 이름붙인 이 지수는 통계 수치를 반영한 ‘실체’와, 26개국 오피니언 리더 1만3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 ‘이미지’로 나뉜다. 조사 항목은 경제·기술, 과학·기술, 인프라, 정부 효율성, 전통문화·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 등 8가지다.

올해 한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5월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27위를,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19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이 종합순위 19위로 나타난 실제 브랜드지수는 미국이 1위였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순이었다.

한국은 과학·기술(4위), 현대문화(8위), 유명인(10위) 등 3개 항목에서 ‘톱 10’에 들었고 경제·기업(14위)도 종합순위를 웃돌았다. 반면 정부효율성(24위), 인프라(25위), 국민(33위), 전통문화·자연(37위)은 점수가 낮았다.

한국이 종합순위 20위를 기록한 이미지 브랜드지수에서는 프랑스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이었다.

한국은 과학·기술(9위)과 경제·기업(15위)이 종합순위를 웃돌았지만 인프라(21위), 국민(22위), 현대문화(24위), 정부 효율성(27위), 유명인(27위), 전통문화·자연(34위) 등 나머지 항목은 모두 취약했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실제 기준으로는 평균치의 97%까지 근접했지만 이미지 기준으로는 89%에 머물렀다. 대외적으로 각인된 이미지가 통계로 나타난 실적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연합뉴스